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 후식



다시 오월이다. 광주는 해마다 이맘때 면 열병을 앓는다. 그날의 핏빛 합성 때문이다. 절절한 외침은 환청이 되어 맨든다. 30년 전 그 날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한 시민군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탱크와 중무장 헬기를 앞세워 난입한 공수부대에 맞서 장렬한 죄후를 선택한 부사들이 꿈꾼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민주와 인권, 자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두가 한울에서 소통하는 대동(大同)세상이었다고 광주 사람들은 믿는다.

일방주의가 판치는 사회

그로부터 한 세대가 바뀌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정당은 유권자와 '따로국밥'이다. 사용자와 노조는 불신으로 대처하고, 시민단체는 시민과 유리돼 있다. 그야말로 불통(不通)의 시대요, 단한 사회다. 곳곳에 칸막이와 장벽이 끔비

불통의 사회, 누가 조장하는가
(不通)

설 타임스가 섭렵한 소통방식을 지적하며 "한국인은 자기네 정부를 진짜 '괴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이 신문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 당국은 음모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과정은 그 지적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해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을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반성이 없으면 사

회발전도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년 전 대규모 거리시위로 위기를 맞았을 때 두 번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과 소통 강화, 대운하 포기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용산참사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논란 등 '절차적 민주주의' 마지막 후퇴시키는 정부의 일방적 독주가 이어질 때마다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호남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 역시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과 무능'

로서 수권(受權)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일당독점 구도 혁파'를 외치는 무소속의 도전이 거세지는 이유다.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라

사회 곳곳에서 일방주의가 판치는 사이나눔과 연대, 소통의 5·18 정신은 희석되고, 추모 열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이는 5·18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다. 오랜동안 주모곡으로 불려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하자 급기야 기념식은 둘로 쪼개졌다. 공무원의 참배를 제한하는가 하면 국가기념일 행사에 대통령 마저 2년 연속 불참했다. '의도적 위상 격하'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거 1주기가 다가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훈은 한결같았다. 화해와 용서, 통합이라는 숙제다.

이 대통령도 2008년 5·18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선진화의 정신적 지주'로 추어올리면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에너지로 승화시키자'고 역설했다. 이제 대통령부터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다. 그것이 오월 영령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경계부장〉 w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김병인



지난 14일 경제문제로 가정불화를 겪던 가정주부가 5살 딸을 안고 진도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필자는 한동안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에는 누가 생활고로 자살했다는 말을 들으면 '죽을 생각으로 악착같이 살면 되지 죽인 왜 죽느냐'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6년 0.27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불러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답은 있을까?

해답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우리 헌법정신을 충족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북극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못사는 사람만 겨우 연명할 정도로 시행되는 현재의 '잔여적 복지'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연대로 모든

기 고

김은선



식품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은 있어야 하고, 해가 되는 성분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식생활 양식의 변화가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이 영양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우려하는 것이 바로 잔류농약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재배, 저장, 유통, 소비에 이르는 단계마다 지도·단속과 수거·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 식품위생법상 농약성분 418종

된 적이 있는 농약성분들을 기본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새로운 부적합 항목이 있으면 검사항목에 추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200항목 중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 '페소밀'과 과거 검출 이력이 있는 '디메토도르프'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농약검사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농산물을 유통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유해농산물이 다 팔리기 전에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 검사의 법적 처리 기한은 30일이지만, 우리 시는 2일 이내에

우리사회 이대로 가야 하나

지난해 0.317을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35를 기록하면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평가되니 한국은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양극화지수를 보더라도 1996년 0.223에서 2006년 상반기에 0.280을 기록해 양극화 심화 현상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절대 빈곤율은 1996년 3.51%이던 것이 2006년 상반기에는 3.6배나 늘어난 12.76%로, 상대 빈곤율은 1996년 8.73%에서 2006년 상반기 16.37%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 사회가 있는 사람은 더 벌고 없는 사람은 더욱 못 버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 사회는 점차 실패가 인생의 종말로 이어지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 독식'의 물이 정착되고 경제적인 실패가 자살로 이어지는 끔찍한 순환구조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에 의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일견 맞는 구석도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심정과 각오라면 못 할 일 없다는 말에 필자 역시 동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일어서고 싶어도 딸고 살 땅이 매우 협소하다는 데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심화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극화가 사회 안정의 핵심 고리인 종산층의 물력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목격했다.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선전된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반면,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보편적 복지체제를 유지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위기를 잘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혹자는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본능적인 거부감을 표할지도 모른다. 또한 사회의 공적부조 강화로 우려되는 '개으름'을 들어 전면적 복지에 의구심을 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는 문화에 해결되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듯, 실직과 실패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면 그 사회의 창조성은 더욱 높게 발현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채택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경제력으로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없이 살아서 열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아파도 변변한 치료도 못 받은 사람들은 북극국가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생계형 자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경고이다.

〈서강정보대학 교수〉

농산물 안전성 검사 '효율성'이 우선

에 대해 마련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모든 농약성분을 검사하면서 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동약끼리 묶어서 한다고 해도 166가지의 각기 다른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단 1건의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복잡한 검사기한인 30일 내에 검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1명의 검사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각 시·도·부 보건환경연구원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검사 인력이나 장비 수준에 맞추어 121항목에서 272항까지 검사항목 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검사의 효율성을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항목을 선정하고 있는데, 2010년 5월 현재 200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418항목 중 재배·시 사용빈도가 높은 농약, 고독성 농약 그리고 지난 5년간 식품의 약물안정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산물검사 관련 기관에서 부적합 판정

검사를 끝내고 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뿐 아니라 생산자에 남아있는 잔량까지 모두 압류·폐기함으로써 유해농산물이 더 이상 시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에 현장 검사소를 설치하여 5시간 이내에 농약검사를 끝내는 상시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만간 이 계획이 실현되면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은 새벽 경매 전에 압류되어 유통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재배과정에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한 생산자는 스스로가 광주시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반입시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전한 농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구제역 방역에 쓰이는 생석회 인체피해 주의해야

요즘 구제역이 또 다시 발생해서 가축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 구제역을 방역하는데 많이 쓰이는 약제가 생석회인데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생석회가 오히려 해가 된다면 안 쓰느니만 못하다는 점이다. 즉 생석회는 그 특성상 적정량을 써야 하는데 그것을 잘못 쓰면 인체에도 상당한 해가 된다.

생석회는 물과 만나면 열 반응(200°C)을 일으켜 구제역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사멸

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서 생석회를 쓰는 거지만 이 생석회가 바람에 날려 피부나 눈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게 된다.

실제로 예전에 구제역 발생시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이 생석회가 뿌려져 있던 곳에 넘어져 실명 위기까지 가는 사건이 발생해 떠들썩했던 사건도 있었다. 앞으로 생석회 사용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장비를 갖추고 조심해서 써야 할 것이다.

〈이재령·광주시 북구 생용동

시설

'반쪽행사'로 끝난 5·18 30돌 기념식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끝났다고 한다. 5·18기념 행사위원회가 그동안 기념식의 주제곡으로 불려온 '임을 위한 행진곡' 제작 순서를 뺀 대 반발해 5·18 기념식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했기 때문이다. 화합과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할 기념식이 두 쪽으로 나뉘어 진행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이번 기념식의 파행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우선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기념식 주제곡으로 쓰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제외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는 가수가 살뜰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애초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에 어울리는 대체곡이나 편곡을 했어야 한다. 30주년 기념식에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현 정부가 5·18 정신을 부인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이 듦다.

30주년 기념식 파행은 한 세대가 흐른 지금까지 5·18은 여전히 '미안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지역, 이념을 떠나 진정으로 5·18의 소중한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광주·전남의 대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통일부가 최근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협력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은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민간후원금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교류사업도 장기 간 규모로 불가피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 북한 비료공장설립 사업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전남도 역시 남북교류단체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사업 모두 무산될 전망이다. 순수민간후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 광주·전남본부의 '종돈 보내기 사업'도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동아시아 평화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 대북교류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5·18의 소중한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때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동아시아 평화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다. 대북교류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5·18의 소중한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때다.

無等鼓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한 평생 나가자면 뜨거운 맹세/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세월은 흘러가도 산전은 안다/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합성/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대를 살았던 대학가와 각종 집회 등에서 빠지지 않고 불리며 민중의례로 자리 잡은 지 한세 대가 된다. 이 노래는 82년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열린 윤상원과 이희동 묘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이 배경이다.